

## 제 2회 『자유 101』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18년 10월 28일 경남 창원시 할리스커피에서

‘작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업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정당한 가격이다.’

-그 둘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없다. “작은(small)” 인플레이션 상승은 정부가 가짜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진정한 투자비용에 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인과가 없다.

‘정부 투자는 산업과 일자리들을 보호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

-정부 투자가 산업과 일자리들에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은 역사적 기록의 문제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성공적인 산업들로부터 세수를 얻어 약간을 성공적이지 않은 산업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확장에의 투자나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될 수 있을 자원들을 가져간다. -중략- 산업에의 정부 투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그 밖의 어떤 사람에게 쓰는 것을 수반한다. 그것이 자기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생계나 보상이 성공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훌륭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산업과 일자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는 한 번 시작되기 시작하면 뒤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좀비기업들이 양성된다. 또 효율적인 배분, 자원들이 제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나은 보건 의료와 교육을 살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것들의 더 나은 변형을 산다. -중략-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사도록 허락될 때,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들어가고, 부자들을 위한 사치품으로서 시작된 것

이 점차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게 된다. -중략- 만약 사람들이 더 나은 보건과 교육을 사도록 허락된다면, 이것은 더 많은 돈을 보건과 교육에 들여온다.

첫째로 자신들의 돈을 자신들이 쓰는 것에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부자들은 대개 세상에 없는 신기술들을 원하고 투자를 한다. 그런 신기술들은 높은 가격의 투자가 반드시 수반된다.

‘민간 부문 보건과 교육은 공공 부문으로부터 아주 최상의 자원들과 인원을 빼낸다.’

-사람들이 민간 보건과 교육의 비용을 지불할 때, 그들은 국가 돈을 절약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쓰는 돈은 보건과 교육에 대한 총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것에 반응적이어야 하므로,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공 부문에게 다소 알려준다. 그것이 국가 서비스 인원을 유출시킨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민간 보건 의료에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오직 작은 부분만이 국가 부문에서 온다.

빼내기보다 선도한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 빈곤이 더 악화되고 있다.’

-사실상 부자들은 정말 더 부유해지고 있고, 아프리카 바깥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더 부유해지고 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에 반해 전 세계적 빈곤이 악화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개발국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우리가 주는 외국 원조를 우리는 증가시켜야 한다.’

-외국 원조는 국가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무역이 그렇게 한다. 어떤 가난한 나라도 지금까지 외국 원조로 부유하게 된 적이 없고, 부유하게 된 어떤 가난한 나라도 무

역 없이 그것을 달성하지 않았다.

빈곤 탈출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게 증거를 모으는 동안 혐의가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장기간 억류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만약 당국이 사람들을 심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을 무한정 구류할 수 있다면, 당국은 사실상 징역형인 것을 인정하는 데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국이 장기간 그렇게 하는 것을 법이 금지하는 이유다. 당국은 형사 피고인들을 몸소 법정에서 내보이도록 요구된다.

공권력의 축소, 시민들의 권한을 키우는 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정부 권력의 절대적인 제한을 요구한다. 그런 것은 헌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